

한국의 노동·시민사회가 고발하는 쿠팡의 불법행위 실태 외신기자 간담회

미국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장소 : 7월 21일 오후 3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 취지 : 지난 7월 1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가 “경쟁체제 폐쇄 : 미국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 내용은 미국 기업, 특히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표적 규제를 비판하며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대한 우려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미국의 쿠팡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의 한국 정부의 규제 및 입법 개입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프로그램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 발언1. 현재 쿠팡을 둘러싼 한미관계 배경 :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변호사
 - 발언2.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진실 : 이은우 변호사, 개인정보유출사건 소송대리인
 - 발언3. 쿠팡 김범석 의장의 과로사 산재 은폐 지시 문제 : 조혜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발언4. 쿠팡의 새벽배송, 24시간 당일배송, 공짜노동 불법해고 등 노동권 훼손 문제 :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
 - 발언5. 쿠팡의 온라인 시장 내 불공정 행위 현황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Press Briefing for Foreign Correspondents : Korean Labour and Civil Society Expose the Reality of Coupang's Unlawful Practices

What Is Wrong with the U.S. House Judiciary Committee's "Coupang Report"?

- **Date & Venue:** 3 p.m., Tuesday 21 July — Areumdeuri Hall, 2nd Floor,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 **Host:** Joint Action to Make Coupang a Safe Workplace
- **Purpose:** On 1 July, the Subcommittee on the Administrative State, Regulatory Reform, and Antitrust of the U.S. House Judiciary Committee released a report entitled "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 The report criticizes what it calls the Korean government's unjust and discriminatory targeted regulation of American companies — Coupang above all — and voices concern over Korea's online platform legislation. Korean labour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old this briefing to set out the problems with the U.S. "Coupang report" and to share their position on U.S. interference in the Korean government's regulation and legislation.
- **Programme**
 - Moderator: Kim Ju-ho, Manager of Center for People's Livelihood Improvement, PSPD
 - Statement 1. The Problems with the U.S. House Judiciary Committee's Report on Coupang (Kwon Young-gook, Co-Representative of The Committee for Healthy Labor and Human Rights of Coupang Workers)
 - Statement 2. The Coupang Personal Data Breach: The Problems (Lee Eunwoo, Attorney at Law, Legal Representative for the Plaintiff in the Coupang Personal Information Leak Case)
 - Statement 3. Coupang's Unlawful, Anti-Human-Rights Repression of Logistics Centre Workers: The Facts, the Problems, and the Union's

Position (Cho Hye Jin, Transportation Work and Policy Director,
KPTU(The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 Statement 4. Coupang's 24-Hour Delivery, Unjust Dismissals, and the Erosion of Labour Rights (Kang Min-wook, Head of Coupang Branch, Taekbaeunion)
- Statement 5. Coupang's Monopoly and Unfair Practices in the Online Market (Lee Yeon-ju, Coordinator of Center for People's Livelihood Improvement, PSPD)

Table of Contents

▣ 발표문 1. 쿠팡 미하원 보고서의 문제점 (쿠팡대책위)	4
▣ Statement 1. The Problems with the U.S. House Judiciary Committee's Report on Coupang (대책위)	5
▣ 발표문2.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문제점 (집단소송법제정연대)	13
▣ Statement 2. The Coupang Personal Data Breach: The Problems (집단소송법제정연대)	18
▣ 발언문3. 쿠팡 김범석 의장의 과로사 산재 은폐 지시, 블랙리스트, 퇴직금미지급 외압 문제 : 공공운수노조	25
▣ Statement 3. Coupang's Unlawful, Anti-Human-Rights Repression of Logistics Centre Workers: The Facts, the Problems, and the Union's Position	26
▣ 발언문4. 쿠팡의 새벽배송, 24시간 당일배송, 공짜노동 불법해고 등 노동권 훼손 문제 : 택배노동조합	33
▣ Statement 4. Coupang's 24-Hour Delivery, Unjust Dismissals, and the Erosion of Labour Rights (택배노조)	36
▣ 발언문5. 쿠팡의 온라인 시장 내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현황 : 참여연대	40
▣ Statement 5. Coupang's Monopoly and Unfair Practices in the Online Marke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42

▣ 발표문 1. 쿠팡 미하원 보고서의 문제점

1.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보고서 주요내용

- 지난 7. 1.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이하 “법사위원회”라 함)는 공화당 소속 스콧 피츠헤럴드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회(이하 “반독점소위원회”라 함)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경쟁체제 폐쇄 : 미국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혁신적인 미국 소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징벌적 의무, 과도한 과징금, 차별적인 집행 관행을 부과함으로써 한국 내 경쟁사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 한 시도에 대해 조사했다고 한다. 본 조사의 일환으로 법사위원회와 반독점소위원회는 한국에서 운영 중인 미국 기업 쿠팡(Coupang Inc.)에 한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과 관련된 문서 및 통신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소환장을 보내고 쿠팡의 최고행정책임자 겸 총괄법률고문인 해럴드 L. 로저스에게 증언 청문회(deposition)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 소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매우 고조되었다고 적고 있다.
- 보고서는 로저스의 청문회 증언 내용과 쿠팡이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 1) 한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 차별을 가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 2)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처분가능한 모든 규제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소유 기업들에 대해 유독 공격적이다.
 - 3) 한국은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기 위해 디지털 법률과 규제를 무기화했다.
 - 4) 한국은 더 광범위한 경제적 차별 패턴의 일환으로 쿠팡(Coupang Inc.) 및 한국 자회사를 상대로 괴롭힘 캠페인을 벌여왔다.
 - 5) 회사를 겨냥한 한국의 캠페인 전개 이후, 쿠팡의 시가총액은 40% 이상 폭락했다.
- 따라서,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최근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미국 소유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차별은 외국 정부들이 자국 산업을 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쟁법 및 기타 규제 체제 하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무기화하는 더 큰 패턴의 일부라는

것이다. 법사위원회는 잠재적인 입법 개혁을 고취하고 미국 기업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외국의 반경쟁적 체제에 대한 감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2. 한국 정부의 입장

가. 7.2.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 위 보고서가 발표된 다음날,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 7월 1일 수요일 발표된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적과 관계가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지속 접촉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 상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이 보고서의 내용 및 그 보고서의 표현이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담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간에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우리의 입장, 그 다음에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감을 또 표명하는 것이다.

나. 7.2. 국정원의 입장문

-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와 관련, 7.2. 국정원은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4조(직무)에 근거,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상황으로 인식하여 관련 정부 수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 측과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다.
- “(개인정보) 유출자가 중국으로 도피하여 보관하던 IT장비 회수를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쿠팡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국정원은 다른 정부 기관을 통해 “중국인 유출자의 IT 장비를 확보했으니, 국내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쿠팡 측의 요청을 전달받기 전까지는, 쿠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던 실무 직원은 물론 어느 누구도 ‘IT 장비’의 존재와 쿠팡 측의 확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 측이 다른 정부 기관을 통해 국내로의 장비 이송을 먼저 요청하였고, 이에 국정원은 유출자가 하천에 유기한 노트북 등에 우리 국민 3,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同장비가 유실·탈취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국내 이송을 지원했을 뿐이다.
- 따라서, 유출자로부터 IT 장비 확보 등 일련의 과정이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쿠팡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다. 국정원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진상 규명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다. 7. 6.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7. 6.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 유튜브 채널에서 “일방적으로 쿠팡의 입장을 반영해 매우 부적절하다. 특정 기업의 행태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균형 잡히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보고서가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 아직 최종 보고서가 아닌, 잠정 보고서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미 의회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잘못된 문제를 법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미국 의회나 정부에 힘입어 외교적 사안으로 만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이어 “쿠팡이 다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바뀌려면 진정 어린 사과와 국민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방식은 쿠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 7. 16.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 이재명 대통령은 7. 16. 청와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6,200여억원(4억 1천만 달러)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나만 표적으로 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3. 해당 보고서의 부적절성

가. 보고서는 조사 방식을 고려할 때, 조사보고서가 아니라 쿠팡의 변론서이다.

-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스스로 쿠팡의 최고행정책임자 겸 총괄법률고문인 해럴드 L. 로저스의 청문회 증언과 쿠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7.2. 박일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 내용과 국정원의 입장문을 고려해 볼 때,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부분의 내용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권위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편협하고 주관적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보고서는 쿠팡의 주장과 제출 자료에만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조사보고서가 아니라 쿠팡의 입장을 대변하는 쿠팡의 변론서에 불과할 뿐이다. 조사보고서로서의 가치는 전무하다 할 것이다.

나. 보고서는 쿠팡의 수천 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전직 직원이 쿠팡의 데이터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경미한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 보고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최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이 권한 없이 쿠팡의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한 사건”으로 “2025년 11월 18일 쿠팡의 정보보안팀은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이 일종의 디지털 비밀번호인 ‘영숫자 풀백 키’를 훔쳐 데이터 시스템에 무단 접근했음을 확인했다”고만 적고 있다.
- 보고서는 전직 직원이 탈취한 인증키로 최대 3,370만개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 직원이 실제 저장·보유한 정보는 약 3,000개의 계정분이라 했다. 접근한 정보도 이름·이메일·전화번호 등 ‘민감도가 낮은 정보’였으며, 사건을 ‘제한된 양의 고객 정보’유출로 설명했다. 이는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3,000건만이 노출되었다’고 문제를 축소하였는데, 보고서의 내용은 쿠팡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3,37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대한민국 성인 전부에 해당할 만큼 역대 최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규모만으로도 사안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쿠팡 계정 소유자 본인 외에도 물품을 대신 구매해 배송한 가족, 친구 등의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제3자 정보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유출자의 협박 메일에는 쿠팡 측 주장과 달리, 성인용품·속옷 구매 내역 같은 민감한 주문 정보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보고서는 전직 직원이 시스템 인증키를 탈취했다고 적고 있으나, 탈취한 것이 아니라 보안 담당 퇴사자가 있음에도 쿠팡은 시스템 인증키 번호를 바꾸는 등의 보안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다. 다른 한국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었던 반면, 쿠팡은 해킹이 아닌 자체 시스템 및 운영의 붕괴(퇴사자의 권한 5개월간 방치와 보안 리스크에 대한 감독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그 책임의 정도가 훨씬 무겁다고 할 것이다.
- 다. 보고서는 쿠팡이 한국에서 저지른 다수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침묵하고, 쿠팡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한국 정부 기관의 조사를 ‘정부의 전방위적인 공격’으로 매도하고 있다.
- 보고서는 최근 불만을 품은 쿠팡 전직 직원이 권한 없이 쿠팡의 데이터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건이 발생한 후, 한국 정부는 무단 접근의 범위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쿠팡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수십 건의 무관한 조사를 개시하는 등 “쿠팡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공격(whole-of-government assault)”을 시작했다고 적고 있다.
 - 보고서는 노동자 과로사, 산재 은폐, 노조 탄압, 블랙리스트,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기관과의 유착 의혹, 상품에 대한 알고리즘 조작, 자사 제품 우대 및 끼워팔기 등 다수의 불법행위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단정하고 있다.
 -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하는 것은 쿠팡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쿠팡이 전방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법률과 규제는 미국 기업 뿐 아니라 한국과 전세계의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미국 기업’이 아니라 국적과 관계없이 ‘독과점 기업’과 ‘독과점을 기반으로 한 불법행위’이다. 구글의 30% 결제수수료 강제, 메타의 개인정보 유출과 알고리즘 조작,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는 ‘혁신’이 아니라 ‘불법행위’이며 한국뿐 아니라 해외, 심지어 미국에서도 엄정한 제재를 받는 행위들이다.
- 미국 하원의 요구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불공정행위와 불법행위를 자행하더라도 이를 규제하지 말라는 압력과 다름없다. 상식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요구인 것이다. 게다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 문제는 이미 전세계적인 문제이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은 유럽연합, 호주, 일본, 인도 등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그런데도 미국 하원은 유독 한국의 디지털 법률과 규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섭하고 반대 압력을 가하고 있다.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왜곡과 거짓으로 채워져 있다. 위원회가 지적한 대부분의 내용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없이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 특히 보고서에는 쿠팡이 그동안 한국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만약 쿠팡이 독과점 기업으로 미국에서 미국 시민들과 미국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한국에서 저지른 것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들을 취했을지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결국 이 보고서의 목적은 한국에서 불법을 저질러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 미국 기업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고, 미국 기업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을 규제할 한국의 법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는 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경제 주권 침해이다.

▣ **Statement 1. The Problems with the U.S. House Judiciary Committee’s Report on Coupang**

1. Main contents of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s Coupang report

- On 1 July, the Judiciary Committee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Judiciary Committee”) released a report entitled “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 prepared in the name of Rep. Scott Fitzgerald (Republican), Chairman of the Subcommittee on the Administrative State, Regulatory Reform, and Antitrust (“the Antitrust Subcommittee”).
- The Judiciary Committee states that it investigated attempts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target innovative American-owned companies and subject them to punitive obligations, excessive fines, and discriminatory enforcement practices in order to shield their Korean competitors from competition. As part of this investigation, the Judiciary Committee and the Antitrust Subcommittee issued a subpoena compelling Coupang Inc., an American company operating in Korea, to produce documents and communications relating to Korea’s alleged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 companies, and required Harold L. Rogers, Coupang’s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and General Counsel, to appear for a deposition. Through this process, the Committee writes, it fou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targeting American-owned companies and that this discriminatory treatment has escalated considerably in recent years.
- On the basis of Rogers’s deposition testimony and the documents Coupang produced, the report claims to establish the following:
 - 1) Korea has a long history of economic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companies.
 - 2) The Korean government uses every regulatory tool at its disposal to target foreign companies,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 particular is singularly aggressive towards American-owned companies.
 - 3) Korea has weaponized digital laws and regulations to und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innovative American companies.

- 4) As part of a broader pattern of economic discrimination, Korea has waged a harassment campaign against Coupang Inc. and its Korean subsidiary.
- 5) Following Korea's campaign against the company, Coupang's market capitalization plunged by more than 40 per cent.
- The report concludes that Korea's discriminatory treatment of American-owned companies directly violates its recent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that Korea's economic discrimination against American-owned companies is part of a larger pattern in which foreign governments weaponize their broad discretion under competition law and other regulatory regimes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from American competition; and that the Committee will continue its oversight of such foreign anti-competitive regimes in order to inspire potential legislative reforms and protect American companies and consumers.

2. The posi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 Regular press briefing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pokesperson, 2 July

- The day after the report was released, the Korean government set out its position through the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s briefing:

"We express regret that the Judiciary Committee report released on Wednesday 1 July one-sidedly reflects only Coupang's claims. The investigations into and measures taken against Coupang are being carried out lawfully and without discrimination under our domestic law, and our government guarantees a fair environment for business activity regardless of nationality. The report's assertion that our government is subjecting Coupang to discriminatory investigations and unjust regulation is therefore contrary to the facts.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engage the U.S. Congress, including the Judiciary Committee, and the U.S. administration to convey accurate information, and will actively explain that we are faithfully implementing the commitment, set out in the Korea-U.S. joint explanatory materials, to treat American digital companies without discrimination. The government will also continue consultations with the U.S. side to ensure that issues concerning Coupang do not adversely affect Korea-U.S. security discussions."

“What we are saying is that the content and language of this report one-sidedly carry only Coupang’s claims, and that the position we have explained to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and the underlying facts, were not reflected at all — and that is why we are expressing regret.”

B. Statement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2 July

- Regarding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report, on 2 July the NIS stated:
“We make clear once again that the NIS never directed, ordered, or coerced Coupang in any way in connection with the ‘incident investigation.’ Acting on the basis of Article 4 (Dutie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the NIS recognized the large-scale data breach by a foreign national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held working-level consultations with Coupang to gather relevant intelligence and prevent the spread of harm. Coupang’s claim that ‘the NIS led the recovery of the IT equipment kept by the leaker, who had fled to China,’ is entirely untrue. Until the NIS received, through another government agency, Coupang’s request to ‘help transport into Korea the IT equipment of the Chinese leaker that we have secured,’ no one — including the working-level staff who had been consulting with Coupang — knew anything of the existence of the ‘IT equipment’ or of the fact that Coupang had secured it. It was Coupang that first requested, through another government agency, the transport of the equipment into Korea; judging that the laptop and other devices the leaker had discarded in a river might hold the personal data of some 33 million of our nationals, the NIS merely supported their safe transport into Korea so that the equipment would not be lost or stolen. Accordingly, Coupang’s claim that the process of securing the IT equipment from the leaker was carried out at the direction or order of the NIS is plainly false. The NIS expresses regret over Coupang’s one-sided false claims and will continue to cooperate actively in all efforts to establish the truth.”

C. Remarks by Hong Ik-pyo,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6 July

- On 6 July, on the presidential office’s new-media press corps YouTube channel, Senior Secretary Hong Ik-pyo said:

- *“It is highly inappropriate, one-sidedly reflecting Coupang’s position.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concerning the conduct of a particular company, a report so unbalanced and so at odds with the facts has come out of a legislature that represents the will of the people. As it is still an interim report, not a final one, we have conveyed our position on this matter to the U.S. Congress in the strongest terms.”*
- *“For a company, instead of resolving its own wrongdoing through the law and in a manner that meets the public’s expectations, to turn it into a diplomatic issue by leaning on the U.S. Congress and administration is utterly inappropriate. If Coupang is to become a company loved by the Korean people once again, it needs to offer a sincere apology and make a real effort to win back the public’s trust. This approach does Coupang no good whatsoever.”*

D. Remarks by President Lee Jae-myung, 16 July

- On 16 July, receiving a policy briefing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t the presidential office, President Lee Jae-myung commented on the fine of more than 620 billion won (US\$410 million) imposed on Coupang over the personal data breach:
- *“The level of fines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violations) has recently gone up, and there seems to be a company claiming, ‘Aren’t you singling me out?’ On this,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clearly to strengthen sanctions. I hope it will be fully explained that this was done according to law and policy, without any regard whatsoever to the characteristics of any particular company.”*

3. Why the report is illegitimate

A. Given how the inquiry was conducted, the report is not an investigative report but a legal brief for Coupang.

-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report itself states that it was prepared on the basis of the deposition testimony of Harold L. Rogers, Coupang’s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and General Counsel, and the materials Coupang submitted. Considered alongside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Park Il’s regular

briefing of 2 July and the NIS statement, most of what the report asserts appears to be a verbatim transcription of Coupang's one-sided claims. The report is so narrow and subjective that it is difficult to regard it as the work of an authoritative state institution. There was no objective verification of the facts, and the Korean government's position appears not to have been reflected at all.

- The report, then, was written solely on the basis of Coupang's claims and submissions: it is not an investigative report but a legal brief pleading Coupang's case. As an investigative report, its value is nil.

B. The report treats a breach of tens of millions of people's personal data as a minor incident of unauthorized access by a former employee.

- The report describes the breach merely as an incident in which "a disgruntled former employee recently accessed Coupang's data systems without authorization," recording only that on 18 November 2025 Coupang's information security team confirmed that a disgruntled former employee had stolen an "alphanumeric fallback key" — a kind of digital password — and accessed the data systems without authorization.
- The report says that although the former employee could have accessed up to 33.7 million accounts with the stolen authentication key, he actually saved the data of only about 3,000 accounts; that the information accessed — names, email addresses, phone numbers — was of "low sensitivity"; and it characterizes the incident as a leak of "a limited amount of customer information." This mirrors Coupang's own announcement of its internal investigation, in which it minimized the problem by claiming that "only 3,000 records were exposed"; the report appears to have adopted Coupang's claims wholesale.
- In fact, the breach of Coupang customers' personal data reached some 33.7 million people — the equivalent of virtually the entire adult popu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largest personal data breach in the country's history. The scale alone makes the matter grave; so does the content. The leaked data has been found to include customers' names, phone numbers, delivery addresses, and building entrance door codes, together with the personal data of numerous third parties — the names, phone numbers, and delivery addresses of

family members and friends who bought or received goods on account holders' behalf. Contrary to Coupang's claims, the leaker's blackmail emails were even confirmed to contain sensitive order details, such as purchases of adult products and underwear.

- The report writes that the former employee "stole" the system authentication key. In truth it was not stolen: despite the departure of an employee with security responsibilities, Coupang neglected the most basic security management, failing even to change the system authentication key. Whereas other Korean companies' data breaches were caused by the external factor of hacking, Coupang's was caused not by hacking but by the collapse of its own systems and operations — leaving a departed employee's credentials active for five months and failing to supervise the security risk — which makes its responsibility far heavier.

C. The report is silent on Coupang's many unlawful acts in Korea, and smears the Korean authorities' investigations of those acts as a "whole-of-government assault."

- The report writes that after the incident of unauthorized access by the disgruntled former employee, the Korean government launched a "whole-of-government assault on Coupang," spreading false information about the scope of the access and opening dozens of unrelated investigations into Coupang's business practices.
- Without so much as mentioning Coupang's many unlawful acts — the deaths of workers from overwork, the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union suppression, the blacklist, the non-payment of severance and the suspected collusion with investigative agencies, the manipulation of product algorithms, the preferencing of its own products, and tying — the report simply pronounces the Korean government's wide-ranging investigations and sanctions to be discrimination against an American company.
- The Korean government is investigating and sanctioning Coupang across the board not because Coupang is an American company, but because Coupang has been breaking the law across the board.

D. The digital laws and regulations being pursu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aimed at monopolistic platform companies everywhere — Korean, American, and global alike.

- What online platform monopoly-regulation legislation seeks to regulate is not “American companies” but monopolistic companies, whatever their nationality, and unlawful conduct built upon monopoly. Google’s forced 30 per cent payment commission, Meta’s personal data breaches and algorithm manipulation, Coupang’s exploitation of its workers — these are not “innovation” but unlawful acts, and they are conduct subject to firm sanction not only in Korea but abroad, including in the United States itself.
- What the U.S. House demands amounts to pressure on Korea not to regulate American companies even when they engage in unfair and unlawful conduct on Korean soil. No country of common sense could ever accede to such a demand. Moreover, the market dominance of the global big-tech companies is by now a worldwide problem, and moves to regulate it are under way in parallel across the major advanced economies — the European Union, Australia, Japan, and India. Indeed,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attempt a legal regime regulating platform monopolies was none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Yet the U.S. House persists in interfering with, and applying pressure against, Korea’s digital laws and regulations — and Korea’s alone.
-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report not only gets basic facts wrong; it is filled with distortion and falsehood. Most of what the Committee asserts is nothing more than a transcription, without any proper verification, of Coupang’s one-sided claims. Above all, the report is completely silent about the unlawful acts Coupang has committed in Korea over the years. It looks away from the question of what measures the U.S. government would have taken had Coupang, as a monopolist, done to American citizens, American small businesses, and American self-employed people what it has done in Korea. In the end,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grant absolution to Coupang — an American company sanction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breaking Korean law — and to neutralize the Korean legal regime that would regulate the unfair

and unlawful conduct of monopolistic online platforms, American ones included. That is naked interference in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ffairs of a sovereign state, and a violation of its economic sovereignty.

▣ 발표문 2.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문제점 (집단소송법제정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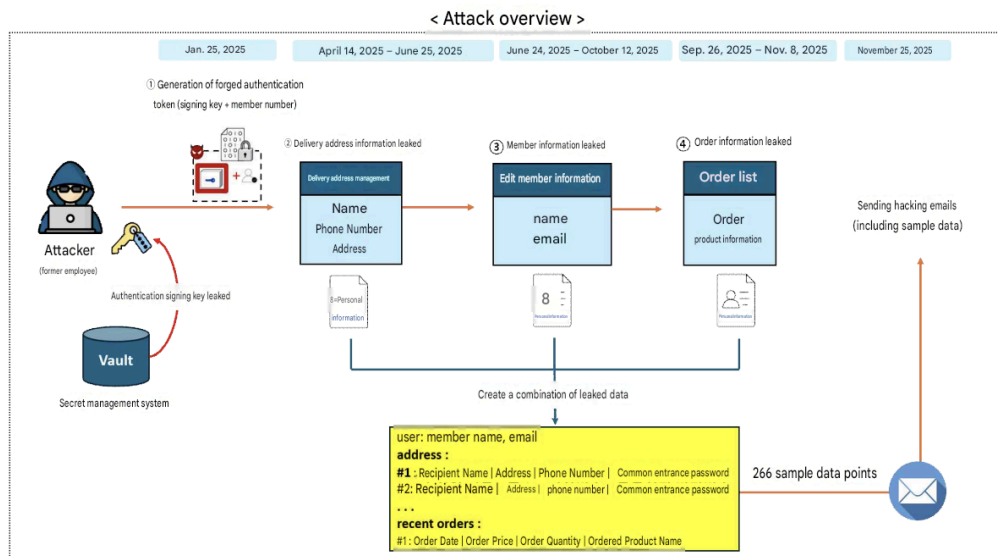
1. 미국 하원 법사위 중간 보고서(2026. 7.)의 주요 내용

-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비민감 정보의 제한적 유출로 규정: 이 사건을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이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여 비민감 고객 정보(nonsensitive customer information)를 훔친 사소한 사건"으로 축소 규정.
- **3,000**건만 저장했으나 모두 회수되었으며, 외부 유출은 절대 없다고 주장: 유출범이 대규모 데이터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것은 단 **3,000**여 명 정보뿐이며, 그마저도 전량 회수되어 추가 유출이 없으므로 피해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명시. 이 점은 유출 직원의 선서 진술서와 Mandiant, Palo Alto Networks와 같은 보안회사로부터 확인되었다고 언급(The scope of this incident was subsequently confirmed by leading cybersecurity companies including Mandiant and Palo Alto Networks as well as by sworn statements from the former employee.)
- 정부 공조를 통한 기기 회수 선전: 쿠팡이 한국의 국가정보원(NIS) 등 정부 당국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상하이 하천에 잠수부를 고용해 노트북을 성공적으로 회수하고 포렌식을 완료했다고 적시.
- 정부(NIS, PIPC, KISA)와 국회가 피해가 경미함을 알고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과장하여 계속 유포하고(The South Korean government knew that the scope of the unauthorized access was far narrower than was being reported. Despite this knowled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d to publicly attack Coupang and spread misleading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 anyway. (중략) spreading false information about the scope of the unauthorized access), 이를 빌미로 미국 기업인 쿠팡의 고객을 한국 및 중국 투자 한국 회사로 옮겨가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Harold Rogers 진술서).
- 국회 청문회를 미국 기업과 미국인에 대한 괴롭힘, 허위사실 유포라고 함. 그러나, 자료 제출에 불성실 대응하고, 3,000건만 저장되었다가 모두 회수되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함(반면, Equifax 정보 유출시 의회는 방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Equifax는 122,000여 페이지의 자료를 제출했고, 핵심 임원들은 대면 진술 조사에 응함).

- 통상 마찰 및 무역 합의 위반 주장: 한국 정부가 피해가 경미한 사건에 대해 400명의 조사관을 보내 과도한 조사를 벌이고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미국인 임원을 형사 처벌하려 협박하는 등 미국 혁신 기업을 차별적으로 타깃하여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

2. 문제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한민국 정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 과거 쿠팡에서 근무하던 당시 대체 인증*을 직접 개발했던 전직 직원(2024. 12. 퇴사)이 대체 인증 서명키를 획득한 이후 사전 유출 테스트 과정(2025. 1.)을 거쳐, 2025. 4. ~ 11.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배송지 관리 및 주문목록 페이지 등을 조회하며 개인정보를 유출.
- 2차 협박 메일에는 한국 회원의 주소 1억 2천만 개, 주문정보 5억 6천만 개, 이메일 주소 3천 3백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제시함.
- 최종 유출 피해자 수: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하여 도합 약 **3,756**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확인.



3. 쿠팡(Coupang Corp.)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최초 공시와 수정 공시

- 최초 공시(2025. 12. 16. Form 8-K 수시보고서) - 항목 1.05. 중요 사이버 보안 사고)에서는 3,300만개 고객 계정의 이름, 전화번호, 배송 주소, 이메일 주소와 일부 계정의 주문 내역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힘.
- 수정 공시(2025. 12. 29. Form 8-K 수시보고서) - [Updates on Coupang Corp. \(Korean Subsidiary\) Cybersecurity Incident](#) : 3,300만개의 고객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범인은 3000개만 다운로드했으나, 모두 삭제하여, 외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힘(“the perpetrator of the Incident has been identified, is cooperating with Coupang and investigators, and has turned over all devices used in the Incident. Further, the investigation to date indicates that while approximately 33 million accounts were accessed, the perpetrator only saved limited data from approximately 3,000 customer accounts, and such customer data has been deleted without having been shared with a third party”).

4.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의 본 조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문제임

(1) 하원 법사위의 조사는 출발점부터 허위에 기반

- 2026년 2월 5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위원장 짐 조던 및 소위원회 위원장 스콧 피츠제럴드)가 쿠팡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에게 발부한 서한 및 소환장(Subpoena)은 “단지 약 3,000명의 고객에 대한 제한적이고 민감하지 않은 정보만 보관되는 결과만 초래했고 그마저도 이미 회수되어 그 어떤 피해도 없는 사건”(despite the fact that the breach only resulted in limited, non-sensitive information being retained for around 3,000 customers that has since been recovered.)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차별이라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함.

(2) Harold Rogers의 2.23. 미국 의회 비공개 증언(Deposition)은 허위 사실로 위증임.

- 2026. 2. 23. Harold Rogers는 의회 비공개 증언함.
- 당시 Harold Rogers는 유출정보의 양이 3,370만명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음.
- 왜냐하면, 2026.2.5. 16시 경 쿠팡은 배송지 목록 확인과정에서 기존 3,370만개 회원계정 외에 165,455개 회원계정의 배송지 정보(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추가 유출이 확인되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 신고.
- 2026. 2. 10.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 보고서 발표. 이때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공식 발표. 이에 대해 쿠팡은 반박하지 못함.
- 따라서 Harold Rogers의 2. 23. 증언은 허위 증언.

(3) 쿠팡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제시하는 근거는 해킹범이 쿠팡 대리하는 중국 로펌에서 받았다는 진술서. 단독범이며, 3000개만 저장했으나 모두 파기했다는

주장.

Mr. [REDACTED] statement

1. I previously worked as a backend engineer at Coupang Corp., and my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Coupang terminated in December 2024.
2. In 2025, I obtained some Coupang user data. The Coupang data I obtained did not contain any users' bank information, credit card information, or login credentials.
3. My purpose in obtaining this data is to reveal a specific vulnerability in Coupang's security system. I did not obtain this data for sale, transfer, or any other purpose; it is solely intended to alert Coupang to this security vulnerability.
4. In November 2025, I sent an email to Coupang and some Coupang users informing them of the data security vulnerability. Apart from the aforementioned email, I have not disclosed, sold, transferred, or shared any Coupang user data, or confidential information of Coupang and its users, to any individual or entity outside of Coupang.
5. After my actions were made public, I immediately deleted all Coupang user data. I no longer hold or control any Coupang user data.
6. On December 9, 2025, I was contacted by Coupang regarding user data that Coupang believes I hold.
7. I no longer possess, store, or control any data, information, or files belonging to Coupang or its users. I also no longer own the computer device that was used to store Coupang user data. However, as stated above, I previously deleted all Coupang data from that computer device, therefore the device no longer contains any Coupang data.
8. I hereby declare that the above cont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m willing to bear legal responsibility for any false statements.

[Translation of one of former employee's sworn statements regarding the unauthorized access]¹

(4) 대한민국의 조사 결과는 전혀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민관합동조사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 침해사고 발생시 구성되는 조사단)의 공식 조사 결과는 전혀 확인, 반영하지 않음. 조사단의 분석 대상 접속기록(로그) 용량: 총 25.6 테라바이트(TB). 전수 조사 통해 확인.

-
11. 본인은 이전에 쿠팡 주식회사(Coupang Corp.)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쿠팡과의 고용 관계는 2024년 1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2. 2025년에 본인은 일부 쿠팡 사용자 데이터를 취득했습니다. 본인이 취득한 쿠팡 데이터에는 사용자의 은행 정보, 신용카드 정보 또는 로그인 자격 증명(비밀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 본인이 이 데이터를 취득한 목적은 쿠팡 보안 시스템의 특정 취약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본인은 판매, 양도 또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 데이터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오직 쿠팡에 이러한 보안 취약점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4. 2025년 11월, 본인은 쿠팡과 일부 쿠팡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보안 취약점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메일을 제외하고, 본인은 쿠팡 사용자 데이터 또는 쿠팡과 그 사용자들의 기밀 정보를 쿠팡 외부의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도 공개, 판매, 양도 또는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5. 본인의 행위가 대중에 공개된 후, 본인은 즉시 모든 쿠팡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했습니다. 본인은 더 이상 어떠한 쿠팡 사용자 데이터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6. 2025년 12월 9일, 본인은 쿠팡 측으로부터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 데이터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습니다.
 7. 본인은 더 이상 쿠팡 또는 그 사용자들의 소유인 데이터, 정보 또는 파일을 보유, 저장 또는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은 쿠팡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했던 컴퓨터 기기를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 명시한 바와 같이 본인은 이전에 해당 컴퓨터 기기에서 모든 쿠팡 데이터를 삭제했으므로, 해당 기기에는 더 이상 쿠팡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8. 본인은 이에 상기 내용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선언하며, 허위 진술이 있을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 회원 개인정보 33,673,817건 (약 3,367만여 건) 유출 확인. 배송지 목록 페이지 무단 조회: 총 148,056,502회 (약 1.48억 회) 조회 및 유출 확인. 총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최소 추정).
 - 반면, 쿠팡은 조사 방해(고의적으로 해킹범 퇴사전 정보 수동 삭제) 및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독립성 보장 위반 등 문제 있음.
- (5) 해킹범은 퇴사(2024. 12.) 전 '인증 서명키(Private Signing Key)'를 노트북 복사하여 유출. 퇴사 후 2025. 1. 테스트 시행. 2025. 4. ~ 2025. 11. 지속적 대대적 유출. 단독 범행으로 볼 수 없음. 협박 메일에도 we라고 표현함. 유출범은 “보안 위험을 단순히 경고하기 위함”이었으며, “본인의 행위가 알려진 후, 정보는 모두 삭제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음.
- (6) 유출 데이터는 매우 민감하며, 2차 범죄(스미싱) 위험이 매우 큼.
- 미 의회는 유출된 데이터가 '비민감 정보'라고 강변하였으나, 이는 심각한 거짓말. 유출된 정보에는 실명, 전화번호, 이메일은 물론 상세 주소와 공동현관 출입 비밀번호, 그리고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최근 주문 내역(성인용품 등 포함)도 포함.
 -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쿠팡 배송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로 스미싱 위험.
5. 결론 - 쿠팡의 대응은 상식적이지 않고, 위법하며, 부당함에도, 미국 의회는 쿠팡의 허위 주장에만 의존하여 쿠팡의 허위 주장을 반복해 주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
- 쿠팡은 2025. 12. 24. “단독 범행이고, 3,000개만 저장되었다가 전량 회수되었고, 외부 유출이 없다”고 조사 결과를 단독 발표함.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실제로 현재 대만에서도 소송 중.
 - 2025. 12. 29.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수정 수사보고서(Form 8-K/A)도 제출함. 이는 허위 공시이며, 중대한 증권 사기에도 해당함.
 - 2026. 2. 23.의 미 의회 비공개 증언도 허위 진술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게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홈페이지 첫 페이지 게시를 중단하라고 [결정](#)(2026. 1. 14.). 이후 쿠팡은 이를 이행함.

▣ **Statement 2. The Coupang Personal Data Breach: The Problems**

(집단소송법제정연대)

1. Main claims of the U.S. House Judiciary Committee interim report (July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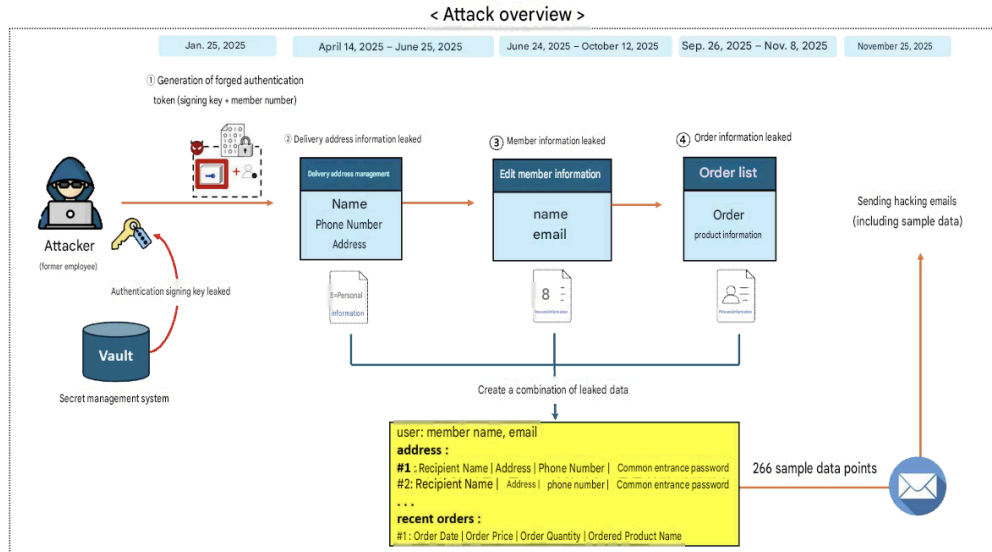
- Framing the incident as a limited leak of non-sensitive data by a disgruntled former employee: the report minimizes the case as a trivial incident in which “a disgruntled former employee accessed the systems without authorization and stole non-sensitive customer information.”
- Claiming that only 3,000 records were saved, that all were recovered, and that there was absolutely no external disclosure: the report states that although the leaker accessed massive volumes of data, he actually saved the data of only some 3,000 people; that even this was recovered in full; and that, there having been no further disclosure, there was effectively no harm at all. It adds that this was verified by the former employee’s sworn statement and by security firms: “The scope of this incident was subsequently confirmed by leading cybersecurity companies including Mandiant and Palo Alto Networks as well as by sworn statements from the former employee.”
- Publicizing the recovery of the devices through government cooperation: the report states that Coupang, at the direction and request of the Korean authorities includ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hired divers to recover a laptop from a river in Shanghai and completed forensic analysis.
- Alleging that the government (NIS, PIPC, KISA) and the National Assembly, knowing the harm was minor, withheld this from the public and kept spreading exaggerated falsehoods — “The South Korean government knew that the scope of the unauthorized access was far narrower than was being reported. Despite this knowled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d to publicly attack Coupang and spread misleading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 anyway ... spreading false information about the scope of the unauthorized access” — with the intent, so Harold Rogers’s statement claims, of driving the customers of

Coupang, an American company, towards Korean companies and Chinese-invested Korean companies.

- Branding the National Assembly hearings as harassment of an American company and an American citizen and as the spreading of falsehoods. Yet it was Coupang that responded to document requests in bad faith and pressed the false claim that only 3,000 records had been saved and all recovered. (By contrast, when Equifax was breached, the U.S. Congress demanded voluminous records; Equifax produced some 122,000 pages of documents and its key executives submitted to in-person interviews.)
- Alleging trade friction and breach of the trade agreement: the report accuses the Korean government of discriminatorily targeting an innovative American company — deploying 400 investigators over a supposedly minor incident, imposing fines running to hundreds of billions of won, and threatening an American executive with criminal punishment — in violation of the Korea–U.S. trade agreement.

2. The problems: the Coupang data breach — what actually happened?

- Finding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joint public–private investigation team: a former employee (who left the company in December 2024) and who had himself developed the fallback authentication system while at Coupang obtained the fallback authentication signing key, ran a preliminary exfiltration test in January 2025, and then, from April to November 2025, exfiltrated personal data by querying member-information edit pages, delivery-address management pages, order-list pages, and more.
- In the second blackmail email, the leaker claimed to hold more than 120 million addresses of Korean members, 560 million order records, and 33 million email addresses.
- Final tally of victims: the breach of the personal data of approximately 37.56 million people, members and non-members combined, has been confirmed.



3. Coupang Corp.'s initial and amended disclosures to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 Initial disclosure (Form 8-K current report, 16 December 2025 — Item 1.05, Material Cybersecurity Incidents): Coupang disclosed its determination that the names, phone numbers, delivery addresses, and email addresses of 33 million customer accounts — and the order histories of some accounts — may have been acquired.
- Amended disclosure (Form 8-K current report, 29 December 2025 — “Updates on Coupang Corp. (Korean Subsidiary) Cybersecurity Incident”): Coupang disclosed that although 33 million customer accounts could be accessed, the perpetrator downloaded only 3,000 and deleted them all, so that nothing was disclosed externally (“the perpetrator of the Incident has been identified, is cooperating with Coupang and investigators, and has turned over all devices used in the Incident. Further, the investigation to date indicates that while approximately 33 million accounts were accessed, the perpetrator only saved limited data from approximately 3,000 customer accounts, and such customer data has been deleted without having been shared with a third party”).

4.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s inquiry is flawed from beginning to end

(1) The inquiry was founded on falsehood from the very outset

- The letter and subpoena issued to Coupang's Harold Rogers on 5 February 2026 by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Chairman Jim Jordan and Subcommittee Chairman Scott Fitzgerald) proceed from the premise that "the breach only resulted in limited, non-sensitive information being retained for around 3,000 customers that has since been recovered," and contend that the investigation of Coupang was nonetheless excessive — hence discriminatory — and warranted an inquiry.

(2) Harold Rogers's closed-door congressional deposition of 23 February was perjury based on falsehoods

- On 23 February 2026, Harold Rogers gave closed-door testimony to Congress.
- By that time, Rogers had already confirmed that the volume of leaked data exceeded 33.7 million people's records.
- This is because at around 4 p.m. on 5 February 2026, Coupang had filed a supplementary report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confirming that, in the course of checking delivery-address lists, the delivery-address data (entered names, phone numbers, and addresses) of a further 165,455 member accounts had been leaked, beyond the existing 33.7 million member accounts.
- On 10 February 2026, the government's joint public-private investigation team published its official report, officially announcing the breach of 33.7 million people's personal data. Coupang was unable to rebut it.
- Rogers's testimony of 23 February was therefore false testimony.

(3) The evidence Coupang and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rely on is a sworn statement said to have been received through a Chinese law firm representing Coupang — claiming a lone perpetrator who saved only 3,000 records and destroyed them all

Mr. [REDACTED] statement

1. I previously worked as a backend engineer at Coupang Corp., and my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Coupang terminated in December 2024.
 2. In 2025, I obtained some Coupang user data. The Coupang data I obtained did not contain any users' bank information, credit card information, or login credentials.
 3. My purpose in obtaining this data is to reveal a specific vulnerability in Coupang's security system. I did not obtain this data for sale, transfer, or any other purpose; it is solely intended to alert Coupang to this security vulnerability.
 4. In November 2025, I sent an email to Coupang and some Coupang users informing them of the data security vulnerability. Apart from the aforementioned email, I have not disclosed, sold, transferred, or shared any Coupang user data, or confidential information of Coupang and its users, to any individual or entity outside of Coupang.
 5. After my actions were made public, I immediately deleted all Coupang user data. I no longer hold or control any Coupang user data.
 6. On December 9, 2025, I was contacted by Coupang regarding user data that Coupang believes I hold.
 7. I no longer possess, store, or control any data, information, or files belonging to Coupang or its users. I also no longer own the computer device that was used to store Coupang user data. However, as stated above, I previously deleted all Coupang data from that computer device, therefore the device no longer contains any Coupang data.
 8. I hereby declare that the above cont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m willing to bear legal responsibility for any false statements.
- [Translation of one of the former employee's sworn statements regarding the unauthorized access — see Annex]

(4) The findings of the Republic of Korea's investigation were neither checked nor reflected in any way

- The official findings of Korea's joint public-private investigation team (a body constituted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event of a grave breach incident) were neither verified nor reflected. The access logs analysed by the team totalled 25.6 terabytes (TB), examined in full.
- The team confirmed the leak of 33,673,817 items of members' personal data (about 33.67 million), and 148,056,502 unauthorized views of delivery-address list pages (about 148 million), with leakage confirmed. In total, the personal data of about 37.55 million people was leaked (a minimum estimate).
- Coupang, for its part, obstructed the investigation (deliberately deleting by hand records from before the perpetrator's departure) and violated the guaranteed independence of its Chief Privacy Officer (CPO), among other failings.

(5) This cannot be regarded as the act of a lone individual

- Before leaving the company in December 2024, the perpetrator copied the private signing key onto a laptop and took it out. After leaving, he ran tests in January 2025, then carried out sustained, large-scale exfiltration from April to November 2025. This cannot be viewed as a lone crime — the blackmail emails themselves say “we.” The leaker claims his purpose was “simply to warn of security risks” and that “after my actions became known, I deleted all the data,” but no reasonable person could believe this.

(6) The leaked data is highly sensitive, and the risk of secondary crime (smishing) is very high

- The U.S. Congress insists that the leaked data was “non-sensitive.” This is a grave falsehood. The leaked data includes real names, phone numbers, and email addresses, as well as detailed home addresses, building entrance door codes, and recent order histories that lay people’s private lives bare (including purchases of adult products).
- Because most of the Korean public uses Coupang’s delivery service, this data creates a serious risk of smishing.

5. Conclusion — Coupang’s response defies common sense and is unlawful and unjust; yet the U.S. Congress, relying solely on Coupang’s false claims, is committing the error of repeating them

- On 24 December 2025, Coupang unilaterally announced the results of its own investigation: “a lone perpetrator; only 3,000 records were saved and recovered in full; there was no external disclosure.” This is plainly false. Litigation is in fact under way, including in Taiwan.
- On 29 December 2025, Coupang filed an amended current report (Form 8-K/A) with the SEC. This is a false disclosure, and also constitutes serious securities fraud.
- The closed-door congressional testimony of 23 February 2026 was likewise a false statement.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ordered Coupang to stop posting its self-investigation results on the front page of its website (14 January 2026); Coupang subsequently complied.

[Annex] Translation of one of the former employee's sworn statements regarding the unauthorized access

"I previously worked as a back-end engineer at Coupang Corp., and my employment with Coupang ended in December 2024.

In 2025, I acquired some Coupang user data. The Coupang data I acquired did not include users' bank information, credit card information, or login credentials (such as passwords).

My purpose in acquiring this data was to expose certain vulnerabilities in Coupang's security systems. I did not acquire it for sale, transfer, or any other purpose; my sole purpose was to warn Coupang of these security vulnerabilities.

In November 2025, I sent emails to Coupang and some Coupang users notifying them of the data security vulnerabilities. Apart from the aforementioned emails, I have never disclosed, sold, transferred, or shared Coupang user data, or confidential information belonging to Coupang and its users, with any individual or entity outside Coupang.

After my actions became public, I immediately deleted all Coupang user data. I no longer hold or control any Coupang user data.

On 9 December 2025, I was contacted by Coupang regarding user data I was believed to hold.

I no longer hold, store, or control any data, information, or files belonging to Coupang or its users. I also no longer possess the computer equipment I used to store Coupang user data. As stated above, however, I previously deleted all Coupang data from that equipment, so it no longer contains any Coupang data.

I hereby declare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accurate, and I am prepared to accept any legal responsibility should any statement prove false."

▣ 발언문**3.** 쿠팡 김범석 의장의 과로사 산재 은폐 지시, 블랙리스트, 퇴직금미지급 외압 문제 : 공공운수노조

1. 쿠팡 기업의 노동기본권 침해와 반인권적 경영 행위

1)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취업 방해 및 노조 탄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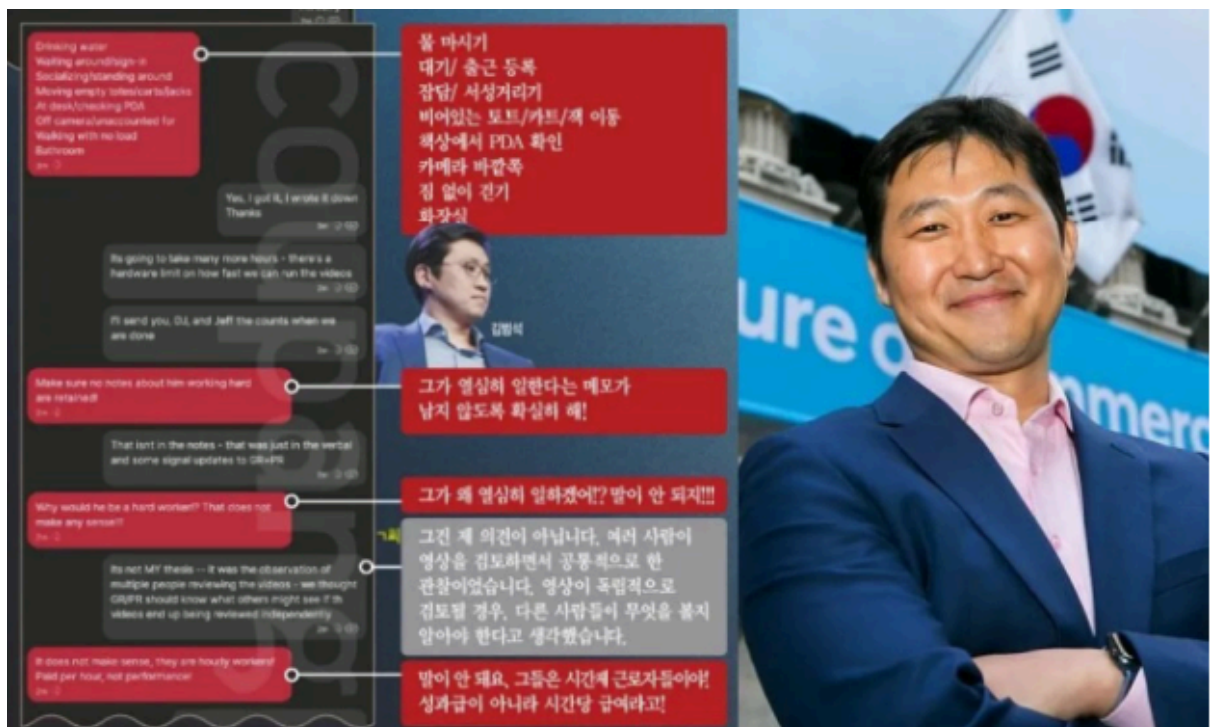
- 쿠팡은 **2017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일명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여 **16,450명**의 노동자, 언론인, 정치인, 유튜버 등의 인적 정보를 관리함. 개인의 근무이력 뿐 아니라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육아/가족돌봄 등 사적인 정보까지 기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용직 채용 거부, 근로계약 종료 등 노무관리, 특히 채용 배제에 활용함
- 이러한 사실은 **2024년 2월에** 쿠팡CFS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인사팀 노동자의 공익제보를 통해 폭로됨. 이는 **MBC**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됨
- 노동조합 설립 초기부터 물류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문제 제기했던 조합원들을 계약 해지하거나 일용직 출근 지원 시 채용 거부함. 쿠팡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까지 블랙리스트 명단으로 올려두고, 노동실태를 고발한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함
- 현재 이 사건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문제제기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및 상설특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2) 노동자 과로사 사망사고와 산재 은폐 지시

-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창고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를 합쳐서 **그간(2020~2025년)** 최소 **3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음. 이들은 대부분 열악한 노동환경과 야간 노동, 물량 속도 압박으로 인한 과로로 쓰러져 사망함
- 그 중 **2020년 10월에**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 장덕준 노동자는 당시 **20대** 건강한 청년이었지만 야간근무 후 퇴근하여 집에서 샤워하던 도중 쓰러져 사망함. 그가 사망한 주된 이유는 물류센터에서 과도한 업무 가중으로 과로사한 것이었음. 이후 유가족이 산재를 신청하여 ‘과로사 산업재해’로 인정받음
- 그러나 쿠팡은 고 장덕준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망 원인을 개인의 건강 문제로 돌리려 함. 고인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 목록을

체크하여 ‘극심한 다이어트’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고인의 업무 수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유가족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산재 신청을 방해함

- 2025년 12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김범석 의장이 고 장덕준 노동자의 고강도 노동 실태를 축소하라고 직접 지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됨. 쿠팡 실무진이 고 장덕준 노동자의 근무 영상을 분석한 자료를 김범석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그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되지”, “그들은 시간제 근로자들이야! 성과급이 아니라 시간당 급여라고!” 라며 과로사를 부정하는 식의 발언을 주고받았음이 드러남



3)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

- 쿠팡CFS는 2023년경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일명 ‘리셋’ 조항을 만듦. 이는 일용직 노동자가 근무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임. 이로 인해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
- 2023년 말부터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8명이 노동부에 고소,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됨. 2025년 1월 23일, 본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함. 이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해당 사건을 맡아
수사했으나 4월 28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됨

- 2025년 5월,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문지석 부장 검사가 자신의 상관이었던 엄희준
검사(당시 부천지청장), 김동희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내부 고발하면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외압으로 무마되었음이 드러남
- 2025년 10월 15일, 본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됨. 10월 26일,
취업규칙의 위법한 조항을 확인하여 근속 리셋 규정에 대해 노동부장관 명의로
'변경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함
- 쿠팡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26년 5월에 퇴직금 미지급 피해 일용직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요구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함

2. 문제점 및 노조 입장

-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 위 사건들과 그간 노조가 대응해온
사안들을 비춰 보았을 때, 쿠팡은 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물류센터의 부품처럼
취급함. 쿠팡은 한국에서 이커머스 국내 1위 기업으로, 수많은 소비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물류센터에서 상주하고 있음. 그러나 365일 24시간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인력의 최소 60% 이상을 일용직, 계약직 등 불안정 고용
형태로 채용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비용만을 지급함. 그리고 사고의 위험이
높은 물류센터 환경에 대한 개선과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마치
기계의 부품을 갈아끼우듯 다른 일용직 노동자로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과로와 산재를 유발하는 노동 구조: 쿠팡의 물류창고와 허브에서는 마감시간 내에
정해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노동자를 엄혹하게 감시, 통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함. 앞서 언급한 블랙리스트에서도 UPH(시간당 생산량)를 자주 채우지
못하는 직원을 따로 기재하여 재고용하지 않거나 현장에서 개인의 이름을 부르며
생산량을 재촉하기도 함. 야간·심야 시간대에 물량과 인력을 가장 많이 배치하고,
식사시간 외에는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아 노동자 건강을 악화시킴. 쿠팡
물류센터 사망사고의 많은 인원이 야간노동 중, 또는 야간노동 후 귀가해서
쓰러진 경우임
- 각종 부당 행위로 만들어진 업계 독점 지위: 쿠팡은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에게 값싼 임금과 수수료를 지급하고, 오래 일한 노동자에게 복지 혜택

등을 주지 않음. 채용 과정에서 수집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등 노동집약적인 물류 사업에서 노동자에 대한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이윤을 창출함. 또한 산재, 노조 활동 등 노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국회, 정부, 법조계 등 인맥을 관리하고 쿠팡 내 고위직 임원 자리에 채용하여 각종 수사 사건에 외압을 행사함. 쿠팡이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이 된 것은 혁신적인 기술과 경영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부정 행위로 얻어낸 독점 지위임

3. 노조 요구안

-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건강한 삶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함
하나, 정부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산재 은폐, 블랙리스트를 활용한 부당노동행위, 퇴직금 등 회피 꼼수를 비롯한 노동기본권 침해 사건들을 엄정히 수사하라
하나, 쿠팡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김범석 의장이 책임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을 하라
하나, 쿠팡 물류센터의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현장의 요구에 대해 대화하라

[붙임] 2020~2025년 쿠팡 물류센터 사망사고 기록 (언론보도 등 공식화된 자료를 통해 수집함)

연도	사망 사례
2020년 (6명)	1월 쿠팡 동탄 물류센터 일용직 여성 노동자 최모씨(50대) 야간근무 후 사망 3월 쿠팡 안산1 캠프 배송노동자 A씨(40대) 야간배송 중 사망 5월 쿠팡 인천 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 B씨(40대) 야간노동 중 사망 6월 쿠팡 천안 물류센터 도급업체 노동자 박모씨(39세) 유해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사망 10월 쿠팡 철곡 물류센터 계약직 청년노동자 장덕준씨(20대) 야간노동 후 사망(과로산재 인정) 11월 쿠팡 마장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최모씨(50대) 근무 중 쓰러져 사망
2021년 (4명)	3월 쿠팡 구로캠프 관리자 C씨(40대) 귀가 후 사망 3월 쿠팡 송파1 캠프 야간 배송노동자 이모씨(40대) 고시원에서 사망 3월 쿠팡 인천 지역 배송노동자 김모씨(40대) 배송 중 사망 4월 26일 쿠팡 용인2물류센터 최모씨(50대) 급성심근경색 사망
2022년 (1명)	2월 쿠팡 동탄 물류센터 노동자 노모씨(50대)
2023년 (6명)	1월 쿠팡 인천3 캠프 하청노동자 D씨(50대) 1월 쿠팡 광주 물류센터 노동자 정모씨(40대) 2월 쿠팡 인천4센터 노동자 F씨(50대) 2월 쿠팡 목천 물류센터 하청 화물노동자 송모씨(60대) 10월 쿠팡 군포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박모씨(60대) 사망 10월 쿠팡 인천 주간 택배노동자 G씨 뇌출혈로 병원 이송됐으나 뇌사판정 받고 사망
2024년 (6명)	5월 쿠팡 남양주2 캠프 배송노동자 정슬기씨(40대) 야간노동 후 자택에서 사망(산재 인정) 7월 쿠팡 경산 쿼플렉스 택배 노동자 H씨 폭우에 휩쓸려 사망 7월 쿠팡 제주 택배소분장 택배 분류노동자 I씨 분류작업 중 쓰러져 사망 7월 쿠팡 화성 동탄 택배노동자 J씨(50대) 야간노동 후 사망(산재 인정) 8월 쿠팡 로켓설치 대리점주 K씨 캠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8월 쿠팡 시흥택배소분장 택배 분류노동자 김명규님(40대) 근무 중 사망
2025년 (8명)	3월 쿠팡 안성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 진모씨(50대) 새벽 근무 중 쓰러져 사망
	4월 쿠팡 김포물류센터 냉동 창고 노동자 S씨(30대) 새벽 근무 중 쓰러져 사망
	8월 쿠팡 안성 주간 택배노동자 L씨 병원 응급실 대기중 사망
	9월 쿠팡 경기광주5 센터 집품 야간 단기계약직 노동자 O씨(50대) 갑자기 쓰러져 사망
	10월 쿠팡 대구4 캠프 주간 택배노동자 M씨 집에서 쓰러져 사망
	10월 15일 쿠팡 김포물류센터 새벽배송 택배기사 R씨 퇴근 뒤 집에서 쓰러져 사망
	10월 24일 쿠팡 용인5 센터 일용직 분류 노동자 N씨(50대) 야간노동 중 심정지로 병원 이송 후 치료 중 사망
	11월 쿠팡 제주1 캠프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오모씨, 운전 중 전신주를 들이받고 중상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
	11월 21일 쿠팡 동탄1 센터 포장 계약직 노동자 Q씨(30대) 야간노동 중 식당에서 쓰러져 병원 이송 후 사망
	11월 26일 쿠팡 경기광주5센터 집품 단기 계약직 노동자 P씨(50대) 새벽 2시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이송 후 사망

▣ **Statement 3. Coupang's Unlawful, Anti-Human-Rights Repression of Logistics Centre Workers: The Facts, the Problems, and the Union's Position**

1. Coupang's violations of fundamental labour rights and anti-human-rights management practices

1) Obstruction of employment and union-busting using workers' personal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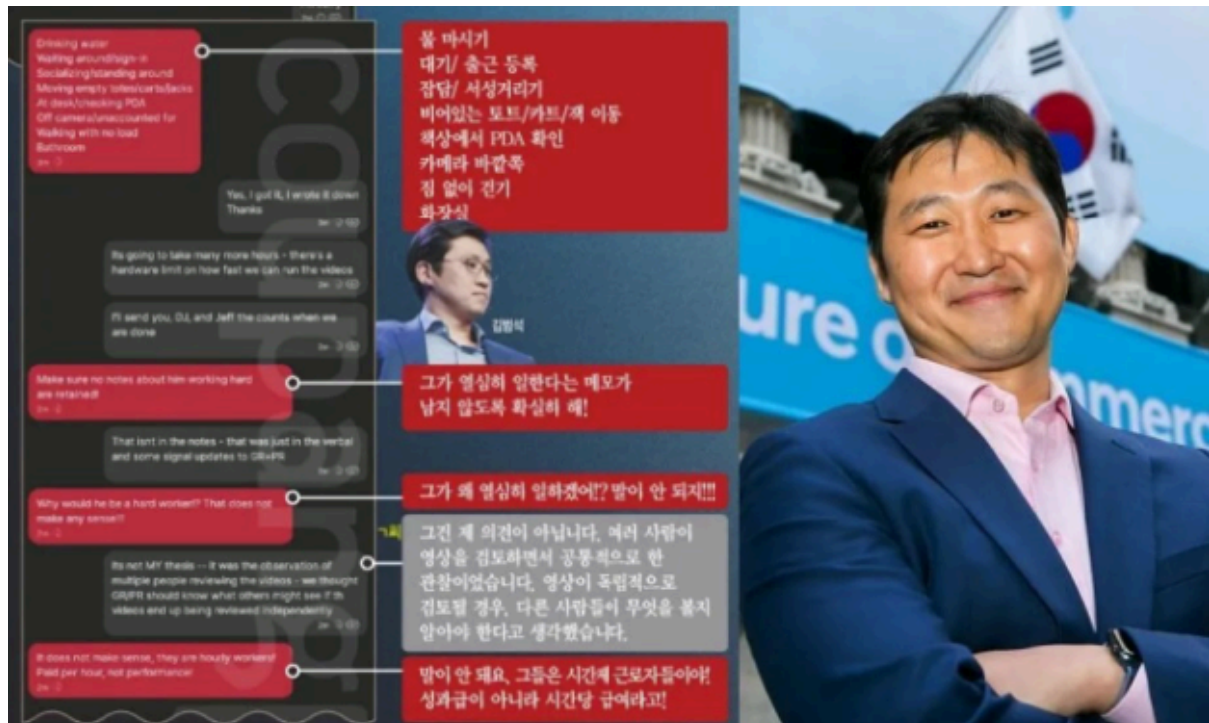
- From September 2017 to October 2023, Coupang compiled a so-called "blacklist," maintaining files on 16,450 workers, journalists, politicians, YouTubers, and others. The files recorded not only individuals' work histories but also private information — "failure to follow work instructions," "negligence," even childcare and family-care responsibilities — and were used for labour management, above all to exclude people from employment: refusing to engage day-hire workers and terminating employment contracts.
- These facts were exposed in February 2024 through a public-interest disclosure by an HR-team worker at Coupang CFS who had carried out this work. MBC reported the story extensively and it became a major public issue.
- From the earliest days of the union, members who raised problems with abusive treatment, workplace harassment, and appalling working conditions inside the logistics centres had their contracts terminated or were refused engagement when they applied for day-hire shifts. Coupang even placed media outlets that reported unfavourably on the company on the blacklist, and filed damages suits against journalists and outlets that exposed working conditions.
- Thanks to the unrelenting efforts of the union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case is now under investigation through a special labour inspection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by the standing special counsel.

2) Deaths of workers from overwork and orders to conceal industrial accidents

- Across Coupang's logistics operations, at least 31 workers — warehouse workers and delivery workers combined — lost their lives between 2020 and

2025. Most collapsed and died from overwork brought on by punishing working conditions, night work, and relentless pressure over volumes and speed.

- Among them was Jang Deok-jun, who worked at the Coupang Chilgok logistics centre. A healthy young man in his twenties, he collapsed and died in October 2020 while showering at home after a night shift. The principal cause of his death was overwork from the excessive workload imposed on him at the logistics centre. His bereaved family applied for workers' compensation, and his death was recognized as an occupational fatality caused by overwork.
- Coupang, however, refused to accept that his death was an industrial accident and tried to attribute it to personal health problems. It combed through the list of items he had purchased on its own shopping platform to claim he had died of an "extreme diet," and it obstructed the compensation claim, including by refusing to provide the bereaved family with CCTV footage of him performing his work.
- In December 2025, messenger conversations disclosed through multiple media reports showed that Chairman Bom Suk Kim had personally instructed staff to play down the punishing intensity of Jang Deok-jun's work. When Coupang staff reported their analysis of video footage of his shifts, Chairman Kim responded in terms that denied the death from overwork: "Make sure no memo is left saying he works hard!"; "Why would he work hard? That makes no sense"; "They're hourly workers! They're paid by the hour, not by performance!"



3) Interference in the severance pay investigation

- Around 2023, Coupang CFS changed its rules of employment to create a so-called “reset” clause: if a day-hire worker’s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fell below 15 even once during their period of service, their previous continuous service would no longer be recognized. As a result, day-hire workers who had worked for more than a year were denied statutory severance pay.
- From late 2023, eight Coupang logistics centre workers filed complaints and petitions wi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an investigation began. On 23 January 2025, the Ministry’s Bucheon branch office, which investigated the case, referred it to the prosecution with a recommendation to indict. The Bucheon Branch of the Inche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hen took over the case, but on 28 April dropped it without indictment for “absence of suspicion.”
- In May 2025, senior prosecutor Moon Ji-seok, who had handled the case, blew the whistle on his former superiors — prosecutor Eom Hui-jun (then head of the Bucheon Branch) and deputy chief prosecutor Kim Dong-hui — for abuse of authority and for drafting and using false official documents, revealing that the Coupang severance pay case had been buried through pressure from above.

- On 15 October 2025, the National Assembly examined the case in its parliamentary audit. On 26 October, having confirmed that the clause in the rules of employment was unlawful, the authorities decided to issue an order in the name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requiring the “service reset” provision to be revised.
- Coupang did not stop there. In May 2026, it sought to bury the case by pressing the day-hire workers who had been denied severance pay to sign statements requesting that the company not be punished.

2. The problems and the union’s position

- Punishing working conditions and precarious employment: The cases above, and the many others the union has fought, show that Coupang treats workers not as human beings but as interchangeable parts of its logistics machine. Coupang is the number one e-commerce company in Korea, and tens of thousands of workers staff its logistics centres to meet the needs of its many consumers. Yet at least 60 per cent of the workforce that keeps those centres running 24 hours a day, 365 days a year is employed in precarious forms — day-hire and fixed-term contracts — and paid no more than around the minimum wage. Coupang evades responsibility for improving the accident-prone conditions of its logistics centres and for the industrial accidents that occur in them, running its operations by slotting another day-hire worker into the vacant place as though replacing a machine part.
- A labour structure that produces overwork and industrial accidents: In Coupang’s warehouses and hubs, work is organized through harsh surveillance and control of workers so that set volumes are pushed through before the deadline. The blacklist itself separately recorded workers who frequently failed to meet their UPH (units per hour) so that they would not be re-engaged, and managers call out individuals by name on the floor to hurry their output. Volumes and staffing are concentrated in the night and late-night hours, and workers are given no rest breaks whatsoever beyond mealtimes, steadily destroying their health. Many of those who died in Coupang’s logistics centres collapsed during night work, or after returning home from it.

- A dominant market position built on misconduct: Coupang pays its logistics centre workers and delivery workers cheap wages and fees, and grants no benefits to those with long service. It generates profit in a labour-intensive logistics business by cutting the cost of labour to the extreme — even wielding the personal data collected in hiring to suppress trade union activity. To manage its “labour risks” — industrial accidents, union organizing — it cultivates connect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and the legal establishment, recruits such figures into senior executive posts, and exerts pressure on investigations. Coupang became Korea’s number one e-commerce company not through innovative technology and management, but through a dominant position obtained by these unlawful practices.

3. The union’s demands

- Korean Public Services and Transport Workers Union (KPTU, 공공운수노조) and the 쿠팡물류센터지회 put forward the following demands to defend logistics centre workers’ fundamental right to a healthy life and to just reward for their labour. One: The government must rigorously investigate the violations of fundamental labour rights at Coupang’s logistics centres — the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the unfair labour practices carried out through the blacklist, and the schemes to evade severance pay and other obligations.

One: Chairman Bom Suk Kim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Coupang’s violations of fundamental labour rights, offer the victims a sincere apology, and compensate them for the harm done.

One: Coupang must adopt measures to remedy the dangerous and degrading working conditions in its logistics centres, and engage in earnest dialogue with the trade union on the demands of the shop floor.

[Annex] Record of deaths in Coupang logistics operations, 2020–2025

(Compiled from press reports and other publicly documented sources)

2020 (6 deaths)	– January: Choi (woman in her 50s), day-hire worker at the Coupang Dongtan logistics centre, died after a night shift – March: A (40s), delivery worker at the Coupang Ansan 1 camp, died during night deliveries – May: B (40s), fixed-term worker at the Coupang Incheon logistics centre, died during night work – June: Park (39), subcontractor worker at the Coupang Cheonan logistics centre, died following exposure to hazardous chemicals – October: Jang Deok-jun (20s), young fixed-term worker at the Coupang Chilgok logistics centre, died after night work (recognized as death from overwork / occupational accident) – November: Choi (50s), subcontracted worker at the Coupang Majang logistics centre, collapsed and died at work
2021 (4 deaths)	– March: C (40s), manager at the Coupang Guro camp, died after returning home – March: Lee (40s), night delivery worker at the Coupang Songpa 1 camp, died in his single-room lodging (goshiwon) – March: Kim (40s), delivery worker in the Incheon area, died while making deliveries – 26 April: Choi (50s), Coupang Yongin 2 logistics centre, died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2022 (1 death)	– February: Roh (50s), worker at the Coupang Dongtan logistics centre
2023 (6 deaths)	– January: D (50s), subcontracted worker at the Coupang Incheon 3 camp – January: Jeong (40s), worker at the Coupang Gwangju logistics centre – February: F (50s), worker at the Coupang Incheon 4 centre – February: Song (60s), subcontracted freight worker at the Coupang Mokcheon logistics centre – October: Park (60s), dawn-delivery worker in Gunpo, died – October: G, daytime delivery worker in Incheon, taken to hospital with a cerebral haemorrhage, declared brain-dead and died

2024 (6 deaths)	– May: Jeong Seul-gi (40s), delivery worker at the Coupang Namyangju 2 camp, died at home after night work (recognized as an occupational fatality) – July: H, Quick Flex delivery worker in Gyeongsan, swept away and killed in torrential rain – July: I, parcel-sorting worker at the Coupang Jeju sorting station, collapsed and died during sorting work – July: J (50s), delivery worker in Hwaseong Dongtan, died after night work (recognized as an occupational fatality) – August: K, Rocket Install agency owner, took his own life at a camp – August: Kim Myeong-gyu (40s), parcel-sorting worker at the Coupang Siheung sorting station, died at work
2025 (8 deaths)	– March: Jin (50s), fixed-term worker at the Coupang Anseong logistics centre, collapsed and died during a dawn shift – April: S (30s), cold-storage worker at the Coupang Gimpo logistics centre, collapsed and died during a dawn shift – August: L, daytime delivery worker in Anseong, died while waiting in a hospital emergency room – September: O (50s), short-term contract picker on the night shift at the Coupang Gyeonggi Gwangju 5 centre, collapsed suddenly and died – October: M, daytime delivery worker at the Coupang Daegu 4 camp, collapsed and died at home – 15 October: R, dawn-delivery driver at the Coupang Gimpo logistics centre, collapsed and died at home after work – 24 October: N (50s), day-hire sorting worker at the Coupang Yongin 5 centre, suffered cardiac arrest during night work and died in hospital – November: Oh, dawn-delivery worker at the Coupang Jeju 1 camp, crashed into a utility pole while driving, was gravely injured and died after being taken to hospital – 21 November: Q (30s), fixed-term packing worker at the Coupang Dongtan 1 centre, collapsed in the canteen during night work and died after being taken to hospital – 26 November: P (50s), short-term contract picker at the Coupang Gyeonggi Gwangju 5 centre, collapsed suddenly at around 2 a.m. and died after being taken to hospital

▣ 발언문4. 쿠팡의 새벽배송, 24시간 당일배송, 공짜노동 불법해고 등 노동권 훼손 문제 :
택배노동조합

1. 사건경과

- 2020~2021년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잇따르자(과로사대책위 집계 26명), 2021년 정부·택배사·노동계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체결함. 분류작업 배제, 주 60시간 초과 노동 제한, 밤 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등이 핵심이며, 주요 택배사가 모두 참여했으나 쿠팡CLS는 현재까지 불참함.
- 2020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으로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시행함. 쿠팡CLS는 주요 택배사 중 유일하게 단 한 차례도 동참하지 않음.
- 2024년 5월 새벽배송 기사 정슬기 씨(41) 사망. 2024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산업재해)로 인정함(주 평균 약 73시간 노동). 같은 해 7월 또 다른 새벽배송 기사(57)가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밤 9시~오전 7시 주 6일 밤샘근무, 주 61시간 45분 노동을 근거로 역시 과로사로 판정함.
- 2025년 11월 10일 제주에서 새벽배송 중이던 기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같은 해 12월 근로복지공단이 장시간 과로 노동을 근본 원인으로 보아 산재를 승인함. 사망 전 주당 최대 83시간, 하루 300개 이상 배송(택배노조 조사).
- 2025년 12월 19일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4차 회의에서 쿠팡CLS가 분류작업 배제, 주 60시간 초과 금지, 사회보험료 원청 부담 등 사회적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2026년 4월 심야배송 과로 방지 논의 역시 쿠팡CLS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 절차로 전환됨.
- 2026년 3월 쿠팡CLS가 강원 춘천(3.18)·원주(3.24)를 포함해 강원·충청·경상·전라·경기의 지방 시군구 약 30곳에 새벽배송(로켓프레시)·야간배송을 일제히 확대함(새벽배송 지역 약 140개 → 170여 개 시군구). 먼저 도입된 춘천에서는 주간 기사들의 배송물량과 수입이 급감함(택배노조 실태조사: 조합원 23명 중 22명 물량 감소, 1인당 월평균 89만 원 수입 감소, 12명이 현장을 떠났거나 떠날 예정).
- 2026년 6월 17일 택배노조·민변·참여연대가 계약에 없는 프레시백(다회용 보냉백) 해체·정리 무상노동 강요를 이유로 쿠팡CLS와 영업점 하하물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그러나 7월 1일 하하물류는 해당 업무를 거부한 춘천 조합원 8명을 한날 집단 계약해지(해고)함.

2. 문제점

- 첫째, 쿠팡의 **24시간·새벽배송**에서 발생한 죽음들은 노조의 주장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식 판정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반복적으로 '고정 심야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사망 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마감시간 안에 모든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시스템 아래에서 노동자들은 밤을 새워 뛰고 있습니다.
- 둘째, 이 구조는 지금 전국으로 복제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2027년까지** 배송 권역을 **182개에서 230여 개** 시군구로 확대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한 달에만** 지방 시군구 약 **30곳**에 새벽·야간배송을 확대했습니다. 야간배송이 먼저 도입된 춘천에서 확인된 결과는 분명합니다. 주간 물량이 야간으로 이전되며 주간 기사들의 소득이 붕괴했고(**1인당 월평균 89만 원 감소, 12명 이탈**), 로켓프레시 도입과 함께 프레시백 회수 부담이 새로 더해졌으며, 야간 배송조 운영에 맞춘 '**20시 배송완료**' 압박으로 노동강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어떠한 소득 보전이나 보호 장치도 없이 강행된 이 전환의 비용은 전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전가됐고, 이번에 새로 확대된 지역 대다수가 춘천과 같은 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 셋째, 미 하원 보고서는 쿠팡을 '차별의 피해자'로 그리지만, 한국 현장의 실체는 반대입니다. 쿠팡**CLS**는 다른 택배사보다 강한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택배사가 함께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장치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와 연 1일의 '택배 없는 날'을 유일하게 거부해 온 사업자입니다.
- 넷째, 계약서에 없는 프레시백 무상노동을 거부한 노동자 **8명**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집단해고됐습니다. 이는 계약해지 시 구체적 위반 사실 적시와 해지 예고를 요구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며, 애초에 시정할 '계약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보복성 해고입니다. '**24시간 배송, 프레시백, 야간 전환**' 이 모든 시스템은 원청 쿠팡**CLS**가 설계했지만, 책임은 영업점과 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3. 개선요구와 입장

- 이 문제는 한미 통상 갈등도, 국적 차별의 문제도 아닙니다. 뉴욕증시 상장기업 쿠팡이 사업을 영위하는 나라의 법과 사회적 약속을 지키는가, 그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택배노조는 새벽배송의 전면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지 않는 배송을, 그리고 배송망 확장의 비용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기지 않는 배송을 요구할 뿐입니다.

-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쿠팡**CLS**와 하하물류는 위법한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계약 외 무상노동 강요를 중단하라.
- 하나, 쿠팡**CLS**는 야간배송 확대에 따른 주간 기사들의 소득 급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며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라.
- 하나, 한국 정부와 국회는 심야노동 과로 방지 및 사회적 합의 제도화 입법을 조속히 완수하라.
- 하나,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그 시스템 아래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기록과 유족·동료들의 증언을 먼저 들어라.

▣ Statement 4. Coupang's 24-Hour Delivery, Unjust Dismissals, and the Erosion of Labour Rights (택배노조)

1. Background and Timeline

- In 2020–2021, as parcel delivery workers died from overwork one after another (26 deaths counted by the 과로사대책위), the government, the parcel delivery companies, and labour concluded the 2021 “Social Agreement to Prevent Deaths from Overwork among Parcel Delivery Workers.” Its core provisions include relieving drivers of parcel-sorting work, prohibiting work in excess of 60 hours per week, and restricting late-night deliveries after 9 p.m. Every major parcel delivery company joined — except Coupang CLS, which refuses to participate to this day.
- Since 2020, under a joint declaration to guarantee delivery workers a day of res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한국통합물류협회, and the major delivery companies have observed August 14 each year as “No-Delivery Day” (택배 없는 날). Coupang CLS is the only major delivery company that has never once taken part.
- In May 2024, Jeong Seul-gi (41), a dawn-delivery driver, died. In October 2024,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recognized his death as death from overwork — an occupational fatality (he had been working an average of roughly 73 hours per week). In July of the same year, another dawn-delivery driver (57) died; the Service likewise ruled his death an overwork death, citing overnight shifts from 9 p.m. to 7 a.m. six days a week and a 61-hour-45-minute workweek.
- On November 10, 2025, a driver making dawn deliveries in Jeju was killed in a traffic accident; in December 2025,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approved the case as an occupational fatality, finding chronic overwork from long working hours to be the root cause. Before his death he had been working up to 83 hours a week and delivering more than 300 parcels a day (택배노조 survey).
- On December 19, 2025, at the fourth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s social dialogue on parcel delivery, it was confirmed that Coupang CLS had failed to

implement the terms of the Social Agreement, including relieving drivers of sorting work, prohibiting work beyond 60 hours a week, and having the principal company bear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In April 2026, negotiations on preventing overwork in late-night delivery likewise failed to reach agreement because of Coupang CLS's refusal, and the matter was referred to the legislative process.

- In March 2026, Coupang CLS simultaneously expanded dawn delivery (Rocket Fresh) and night delivery to roughly 30 provincial cities and counties across Gangwon, Chungcheong, Gyeongsang, Jeolla, and Gyeonggi provinces, including Chuncheon (March 18) and Wonju (March 24) in Gangwon (dawn-delivery coverage grew from about 140 to more than 170 cities and counties). In Chuncheon, where the rollout came first, daytime drivers' delivery volumes and incomes plummeted (택배노조 field survey: 22 of 23 union members saw their volumes fall; incomes dropped by an average of 890,000 won per month per driver; 12 have left the job or plan to leave).
- On June 17, 2026, 택배노조,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n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filed a complaint wit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gainst Coupang CLS and its delivery agency 하하물류 for forcing drivers to perform unpaid labour nowhere provided for in their contracts — dismantling and sorting Fresh Bags (reusable cooler bags). Yet on July 1, 하하물류 terminated the contracts of the eight Chuncheon union members who had refused that work — a mass dismissal carried out on a single day.

2. The Problems

- First, the deaths in Coupang's 24-hour and dawn-delivery operations are not union allegations — they are facts confirmed by the official rulings of state institutions.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has repeatedly recognized "fixed overnight work and excessively long hours" as the cause of these deaths. Under a system that requires every parcel to be delivered before a hard deadline, workers are running through the night.

- Second, this structure is now being replicated across the country. Coupang is investing more than 3 trillion won to expand its delivery coverage from 182 to some 230 cities and counties by 2027, and in March of this year alone it extended dawn and night delivery to roughly 30 provincial areas. The results in Chuncheon, where night delivery arrived first, are unmistakable: daytime volumes shifted to the night shift and daytime drivers' incomes collapsed (an average loss of 890,000 won per month per driver; 12 drivers gone); the launch of Rocket Fresh added the new burden of Fresh Bag collection; and pressure to "complete all deliveries by 8 p.m." to fit the night-shift schedule made the work even more intense. The entire cost of this transition — forced through without any income protection or safeguards whatsoever — has been shifted onto workers in special forms of employment, and the great majority of the newly expanded regions now stand exposed to exactly the same problems seen in Chuncheon.
- Third, the U.S. House report portrays Coupang as a "victim of discrimination," but the reality on the ground in Korea is the opposite. Coupang CLS is not subject to stricter regulation than other delivery companies. It is the one operator that has refused the minimal safeguards every other delivery company has upheld together: the Social Agreement to prevent deaths from overwork, and a single day of rest each year — "No-Delivery Day."
- Fourth, eight workers who refused unpaid Fresh Bag labor found nowhere in their contracts were dismissed en masse — whil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review was still under way. This violates Article 11 of the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Life Logistics Service Industry Development Act), which requires that any contract termination specify the concrete violation and be preceded by advance notice — and it is a retaliatory dismissal in which no "contract violation" to be remedied ever existed in the first place. The entire system — 24-hour delivery, Fresh Bags, the shift to night work — was designed by the principal company, Coupang CLS; yet the responsibility is being dumped onto delivery agencies and workers.

3. Our Demands and Position

- This is not a matter of U.S.–Korea trade friction, nor of discrimination by nationality. It is a question of whether Coupang, a company listed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will obey the laws and honour the social commitments of the country in which it does business — and whether it will respect the lives and safety of the workers who deliver for it. 택배노조 has never called for a total ban on dawn delivery. We demand only this: delivery that does not kill, and a delivery network whose costs of expansion are not dumped on workers alone.
- Our demands are as follows. One: Coupang CLS and 하하물류 must immediately revoke the unlawful mass dismissal and stop coercing unpaid labour outside the contract. One: Coupang CLS must adopt measures to address the sharp fall in daytime drivers' incomes caused by the expansion of night delivery, implement the Social Agreement to prevent deaths from overwork, and join “No-Delivery Day.” One: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must swiftly complete legislation to prevent overwork in late-night delivery and to institutionalize the Social Agreement. One: the U.S. administration and Congress must listen first — not to Coupang’s one-sided claims, but to the records of the workers who lost their lives under its system, and to the testimony of their bereaved families and co-workers.

▣ 발언문5. 쿠팡의 온라인 시장 내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현황 : 참여연대

1. 사건경과

- 쿠팡을 상징하는 주요 키워드는 ‘초저가, 무료·새벽배송’임. 이는 쿠팡이 다른 온라인 쇼핑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료 멤버십 비용에 초저가, 당일배송, 여러가지 묶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임.
- 그러나 쿠팡이 초저가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입점업체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임. 쿠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내부적으로 PPM(Pure Product Margin, 순수상품판매 이익률), GM(Gross Margin,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수익성 목표를 관리해 옴. 목표에 미달하는 상품에 대해 납품업체에게 납품 단가를 내리거나, 광고상품을 추가로 구매하거나, 체험단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할 것을 강요해 옴.²
- 이러한 초저가, 빠른 배송 전략을 통해 이용자를 극대화했고, 2023년 이미 활성고객 2,100만을 달성했음. 쿠팡은 2024년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점유율 23%로, 1위 독과점사업자임.
- 쿠팡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2024년도 부터 ‘쿠팡이츠(음식 무료 배달)’서비스, ‘쿠팡플레이(OTT)’와 같이 온라인 쇼핑과 상관없는 별개의 서비스를 유료 멤버십에 묶어서 판매하기 시작함.

2. 문제점

1)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 갑질과 소비자 피해

- 쿠팡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기 상품인 PB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조직적으로 임직원을 동원하여 허위 리뷰와 높은 별점을 부여함.
- 그 결과, 쿠팡에서 판매되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개 이상의 중개상품보다 PB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노출함.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PB상품이 더 많은 고객의 선택을 받거나 더 좋은 품질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더욱 큰 폭의 PB상품 매출 증대효과를 가져옴. 반대로 쿠팡PB 납품업체 이외의 중소기업 및 중개거래 사업자들은 검색순위 후순위로 밀려남.

²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6.02.26](#)

2)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지배력 전이

- 쿠팡의 활성고객 수는 **2026년 1분기 2,390만 명**가량으로, 특히 모바일쇼핑 분야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로서 모바일커머스 앱 트래픽을 주도하고 있음. 그러나 쿠팡은 이 과정에서 **2019년 쿠팡이츠(배달앱) 서비스, 2020년 쿠팡플레이(OTT) 서비스** 등을 출시하였고, 와우 멤버십 회원들은 위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쿠팡 점유율이 OTT 서비스 시장 및 배달앱 시장으로 전이됨.
- 또한 쿠팡은 와우 회원 멤버십 서비스 가격을 **2019년 2,900원**으로 시작해 **2021년에 4,990원으로 72.1% 인상, 2024년 7,890원으로 60%가량** 인상함.
- ‘끼워팔기’ 문제로 인해 쿠팡이츠 및 로켓프레시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는 쿠팡플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와우 멤버십 요금제 인상으로 가격만 상승함.

3) 쿠팡이츠 최혜대우 강요

- 쿠팡이츠는 현재의 배달앱 중개수수료 요금제 운영 전인 **2024년까지** 타 경쟁사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운영했음. 입점업체가 마진 보전을 위해 음식 가격을 타 경쟁사보다 높게 책정할 때 입점업체에게 상품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플랫폼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함.³
- 쿠팡이츠는 **2023년 3월부터** 메뉴 가격, 최소주문 금액, 메뉴 수, 기타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조건을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강요(최혜대우 강요)하면서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와우 매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함. 이런 조치는 사실상 신규 고객 유입을 막는 행위임.
- 이에 입점업체는 결국 높은 중개수수료 기준으로 음식 가격을 상향화했고, 전체적인 배달앱 내 음식가격이 인상되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함.

³ [KBS, “사장님, 배민이랑 저희랑 2천원 차이 나는데”...’최혜 대우’ 뭘기에? 2024.11.06](#)

▣ **Statement 5. Coupang's Monopoly and Unfair Practices in the Online Marke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1. Background

- The keywords that define Coupang are “rock-bottom prices” and “free, dawn delivery.” Within the online shopping market, Coupang offers ultra-low prices, same-day delivery, and assorted bundled services for a paid membership fee that is comparatively cheap.
- But the reason Coupang can sustain its ultra-low-price strategy is that it shifts the cost burden onto the businesses selling on its platform. From 2020 to 2022, Coupang internally managed profitability targets known as PPM (Pure Product Margin) and GM (Gross Margin). For products falling short of target, it forced suppliers to cut their supply prices, purchase additional advertising products, or bear extra costs such as product-trial review programmes.[1]
- Through this ultra-low-price, rapid-delivery strategy Coupang maximized its user base, already reaching 21 million active customers in 2023. As of 2024, with a 23 per cent share of Korea's online shopping market, Coupang is the number one, dominant operator.
- On the strength of that market share, from 2024 Coupang began bundling into its paid membership entirely separate services unrelated to online shopping, such as Coupang Eats (free food delivery) and Coupang Play (an OTT service).

2. The problems

1) Abuse of small and medium-sized merchants on the strength of market dominance[2]

- From 2019 to 2023, in order to boost sales of its own private-brand (PB) products, Coupang manipulated its search algorithms and systematically mobilized executives and employees to post fake reviews and award high star ratings.
- As a result, PB products were exposed at the top of search rankings, ahead of the more than 400 million marketplace products of the 210,000 businesses selling on Coupang. This misled consumers into believing that PB products were chosen by more customers or were of better quality, which in turn drove even

greater growth in PB sales. Conversel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marketplace sellers outside Coupang's PB supply chain were pushed down the search rankings.

2) Transferring market dominance into other markets through tying

- Coupang's active customers numbered about 23.9 million in the first quarter of 2026, and in mobile shopping in particular it is the overwhelming number one operator, dominating mobile-commerce app traffic. Along the way, Coupang launched Coupang Eats (a food-delivery app) in 2019 and Coupang Play (an OTT service) in 2020, which Wow membership subscribers can use free of charge — with the result that Coupang's dominance of the e-commerce market has been transferred into the OTT and food-delivery app markets.
- Coupang has also raised the price of its Wow membership from 2,900 won at launch in 2019 to 4,990 won in 2021 — a 72.1 per cent increase — and to 7,890 won in 2024, a further increase of around 60 per cent.
- Because of this tying, people who live in areas where Coupang Eats or Rocket Fresh is not available, or who do not use Coupang Play, enjoy none of the bundled benefits while paying ever-higher membership fees.

3) Coercing most-favoured treatment on Coupang Eats

- Until 2024, before its current commission scheme for delivery-app brokerage was in place, Coupang Eats charged higher brokerage commissions and delivery fees than its competitors. When merchants set their food prices higher than on competing platforms to preserve their margins, Coupang Eats demanded that they apply prices and other terms of trade equal to, or more favourable than, those offered on other platforms.[3]
- From March 2023, Coupang Eats coerced merchants into setting menu prices, minimum order amounts, the number of menu items, discount benefits, and other terms no less favourably than on competing platforms (coerced most-favoured treatment), giving notice that merchants who failed to comply could be excluded from "Wow stores" — in effect, a measure cutting off the inflow of new customers.
- Merchants ultimately raised their food prices to match the high commissions, pushing up food prices across the delivery apps and causing harm to consumers.

Notes

[1]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anction against Coupang Co., Ltd. for violations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대규모유통업법), 26 February 2026.

[2]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anction against Coupang Co., Ltd. and CPLB Co., Ltd. for luring customers by deceptive means, 13 June 2024.

[3] KBS, “‘Boss, your prices here are 2,000 won higher than on Baemin’ — what is this ‘most-favoured treatment’?”, 6 November 2024.